

# 2017년 초점

## 문재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탄생...‘촛불혁명’

### ■ 개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러일으킨 촛불혁명으로 2017년은 초반부터 조기 대선 열기에 휩싸였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박 대통령이 파면되자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대통령이 꺾워진 때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은 5월 9일로 정해졌다. 이때가 장미가 만개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19대 대선은 ‘장미대선’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진보진영의 대선 레이스는 2016년 4·13 총선에서 원내 1당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 위주로 펼쳐졌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이 당내 경선을 치러 문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반면에 보수진영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전부터 강력한 대

권 주자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 문 전 대표에 대항하기 위해 ‘비문 연대’ 구성과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으나, 어느 후보도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큰 충격을 받은 보수층 표심은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여러 후보를 떠돌았다. 대선 레이스 초반 보수표심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향했으나, 반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일부가 온건 성향의 진보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에게로 옮겨가기도 했다. 이후 민주당 후보로 문 전 대표가 확정되자 보수표심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게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결국 대선은 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5파전으로 치러졌으며, 문재인 후보가 41.08%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 ■ 촛불이 이뤄낸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2016년 10월 29일 시작된 촛불집회의 열기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2017년 1월 7일, 새해 들어 처음 열린 광화문 촛불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64만 명이 참가했고, 2월 25일 열린 17차 촛불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7만 명이 참가했다.



▲ 2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17차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달아오르는 촛불집회의 열기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 심판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현재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훼손, 직권 남용, 기업의 재산권 침해, 기업경영의 자유 침해,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위배, 헌법수호의지 없음 등을 근거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에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으나, 그의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검찰은 파면 11일 만인 3월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 ■ ‘장미대선’ 확정…조기대선 열기 속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됐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선일을 5월 9일로 지정했다. 애초 예정됐던 19대 대통령 선거일은 2017년 12월 20일이었다. 대선일이 확정되자 진보·보수 진영은 사활을 건 레이스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대선 때 박 전 대통령과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됐으나 1월 26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선후보를 선출할 선거인단으로 214만 명을 확보한 민주당은 당내 경선을 통해 전 지역에서 1위를 기록한 문재인 후보를 결선투표 없이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자유한국당은 김관용, 김진, 김진태, 신용환, 안상수, 원유철, 이인제, 조경태, 홍준표 등 9명의 후보가 예비경선에 등록했고, 1·2차 컷오프 결과 김관용, 김진태, 이인제, 홍준표 등 4명의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다. 3월 31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경남지사를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국민의당 경선 예비후보로는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양필승, 김원조, 이상원 등 6명이 등록했으며 이 가운데 박주선, 손학규, 안철수 후보가 예비경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 완전국민경선 80%, 여론조사 결과 20%를 반영해 안철수 전 대표를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바른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은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간의 2파전으로 전개됐다. 네 차례의 TV 토론회를 거쳐 일반 국민 여론조사, 전 당원 투표, 전화면접 투표 등의 결과를 합산해 유 의원을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정의당은 당원투표를 통해 심상정 대표를 대선후보로 내세웠다.

### ■ 선두주자 문재인…마음 둘 곳 잃은 보수표심

국정농단이 드러난 직후부터 문재인 대선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렸다. 2012년 대선 때 박 전 대통령과

양강 구도를 형성해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굳힌 데다 박근혜 정부에 실망한 국민의 지지가 집중된 결과였다.

문 후보에게도 몇 번의 위기는 있었다. 첫 번째는 문 후보에 대항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보수 후보로 주목받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이었다. 반 전 총장은 귀국 직후 인천공항에서 “한 몸을 불사를 각오가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전국을 돌며 귀국인사를 겸한 대선 행보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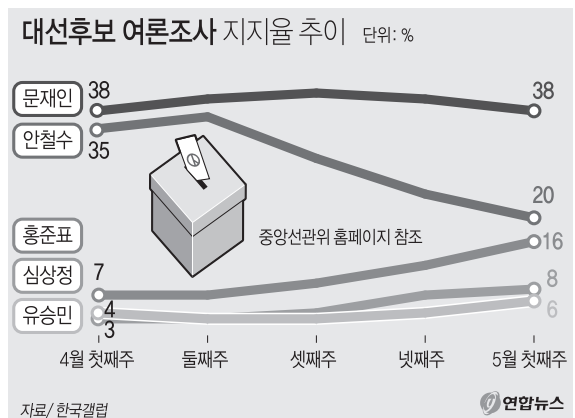
그러나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정치적 언행에 익숙하지 않았던 반 전 총장은 크고 작은 약점을 드러냈다. ‘진보적 보수주의’를 주창했으나 이도 저도 아닌 언행으로 ‘반반(半半)’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돌발 발언이 이어지면서 숙성되지 않은 후보라는 인상을 남겼다. 그 결과 한때 문 후보와 선두를 다툴 정도로 치솟던 지지율은 10% 초중반으로 급락했다. 반 전 총장은 결국 2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교체와 국가 통합을 이루려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반 전 총장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던 보수표심은 그의 불출마 선언으로 크게 요동쳤다.

반 전 총장의 사퇴 이후 보수진영에서 ‘문재인 대항마’로 떠오른 인물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황교안 국무총리였다. 한국당은 그를 대선후보로 영입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 그러나 황 총리는 대선 출마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3월 15일에야 “대선 관리에 전념하겠다.”며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반 전 총장에 이어 황 총리마저 사라지자 민주당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이 몰리는 ‘기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권을 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긴 보수층이 문 전 대표보다 상대적으로 온건·보수 성향을 보이는 안 지사가 당선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4월 3일 전당대회에서 문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 보수표심은 국민의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안철수 전 대표에게로 쏠렸다. 4월 초 안 후보는 기존 지지층에 보수층의 지지를 더하며 세몰이에 나섰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안 후보의 지지율이 문 후보에 앞선다는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4월 중순부터 시작된 TV 토론 이후 안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4월 23일 3차 TV 토론에서 나온 ‘MB



아바타', '갑(甲) 철수'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국민의당 대선평가위원회도 '19대 대선평가보고서'에서 대선후보 TV 토론을 결정적인 패인으로 분석했다.

평가위는 “안 후보는 TV 토론에서 크게 실패했다. 내용도 없는 중도를 표방함으로써 오히려 'MB 아바타'라는 이미지를 강화했고, 적폐청산에 반대한다는 이미지,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에 대해 비판은 하지만 대안은 없다는 이미지를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되면서 보수표심은 크게 안 후보와 한국당 홍준표 후보로 양분됐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홍 후보는 2월 16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선 출마를 선언해 한국당 후보로 선출됐다. 홍 후보는 특유의 직설 어법을 내세워 TV 토론에서 선전했고, 10% 전후에 머물던 지지율을 대선 레이스 막판에는 20%에 육박할 정도로 끌어올렸다.

### ■ 문재인 당선...41.08% 득표율 · 17개 시 · 도 중 14곳 선두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선의 총 선거인 수는 4천247만19천710명이었다. 이 가운데 26.06%인 1천107만2천310명이 5월 4~5일 치러진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최종 투표율은 77.2%로 3천267만2천175명이 '한 표'의 권리를 행사했으며, 이 중에서 1천342만3천800표(41.08%)를 차지한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문 후보는 17개 시 · 도 가운데 대구 · 경북 · 경남을 제외한 14개 지역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전국 시 · 군 · 구 중 175곳에서 승리했다.

대구 · 경북 · 경남에서는 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홍 후보는 785만2천849표(24.03%)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699만8천342표(21.41%)를 얻었으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220만8천771표(6.76%),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01만7천458표(6.17%)를 득표했다.

재외국민투표에서도 문 후보는 59.0%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으며, 안철수(16.3%), 심상정(11.6%), 홍준표(7.8%), 유승민(4.5%) 후보가 그 뒤를 이었다.

### ■ '모두의 대통령' 천명...야당 먼저 찾고 한 · 미 정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임기 5년의 제19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취임 선서를 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했다. 그는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라며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훗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월 10일 오후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취임식에는 5부 요인과 국회의원, 국무위원, 군 지휘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고,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다.”고 다짐했다.

취임식에 앞서 문 대통령은 야 4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났다. 국정을 안정시키고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조건인 만큼 원활한 관계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로 입성해 전 정부에서 임명한 황교안 국무총리와 오찬을 함께한 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직접 신임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대통령비서실장, 경호실장, 국가정보원장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제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 첫날 일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로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 박근혜 대통령 파면... 국정농단 재판

### ■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파면

2016년 하반기 '박근혜 정부'를 뒤흔든 '비선 실세' 최순실(가명 후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파문은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현재는 그로부터 3개월 뒤인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3월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월 31일 새벽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